

# 與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열겠다”

### 원내지도부, 피해자 가족모임 만나 관련법 제정·장관 사과·검찰 수사와 상관 없이 개최 공감대 형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을 만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피해자 가족모임을 만나 관련법 제정, 장관 사과, 검찰 수사와 상관 없는 청문회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장은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검찰 수사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또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우려했었는데 이에 대해 가피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단) 회장이 지금 수사 중인 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것이기에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병원에서 어떻게 했고 정부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건 참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걸 청문회 해서 진상을 밝히는 건 새누리당은 찬성이다. 미루고 할 게 아니다”며 “지금까지 어떤 수 없이 정부가 설명, 해명했는데 이런 건 국가가, 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대로 지원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근거 법을 만들어지는 데 주저하지 말자 이렇게 원내대표와 가족 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한 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국회로 부르는 건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 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지금 조사 받는 사람들은 회사와 관련 된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왜 허가가 났고 하는 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면담하기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국회 원내대표실로 가고 있다.

김 의장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신고해 판정을 빨리 받게 하는 것, 또 이게 폐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관련 장기 손상 판정도 빨리 하게 하는 건 정부가 반대 할 이유도 없고 국회도 전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례비, 치료비, 생활비도 적극 지원되게 기재부랑 국무조정실이 나서면 좋

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대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좀 더 자주 열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은 공무원 등이 법, 근거가 없으니 잘 안하려고 해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할지 비슷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전제로,

시스템으로 담아내는 일반법으로 할지 야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직 환경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성과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번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정 원내대표가 차분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성주 기자

## 盧추도식 욕설 논란 봉합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3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당시 있었던 일부 참석자들의 욕설과 관련한 논란을 봉합시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논평에서 “일부 참석자의 언행이 과도하게 부각돼 추도식의 본뜻이 왜곡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욕설을 들은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어제 참석한 모든 분들을 감사드리고 특히 봉하마을까지 먼 길을 찾아주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차분하고도 열린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며 “참석한 대다수 시민들도 주최 측의 뜻을 수용해 성숙한 자세로 추도식에 임했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은 서민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하지는 열망을 담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재단 관계자들, 더욱이 권양숙 여사께서 친히 국민의당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들이들 따르게 환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의 고귀한 국정철학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추도식 현장에선 일부 친노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인사들에게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봉하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같은 공격이 시작됐으며, 결국 안 대표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해야 했다. /이성주 기자

## “경제정책 틀 바꾸려면 더민주 집권해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음 안 된다. 우리가 집권 안 하면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민주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시대 일자리 정책콘서트’에 참석해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 기술수준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과거 대기업에 쏠려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지역업체, 소상공인 쪽에 쏠리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저성장 시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내년 대선에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국민들이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해서 정권을 쥔게 해야만 우리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국회법개정안, 공포 안하면 자동 폐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청문회 의견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은 5월 30일 자동 폐기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의회기본원칙 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효력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며 “대통령은 5월 29일 이전엔 공포할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월 30일부터는 공포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의순밤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론을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무슨 그런 헌법 해석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통과된 것 아니냐,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재의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說)이 다를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19대)와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가결하는 국회(20대)하고 다르니까”라고 말했다. 자동 폐기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로 이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그것(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 국회와 거부권 행사 국회)가 다른 상황)도 통과시킨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런(자동 폐기) 해석이 있느냐, (김 의원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비난했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대선후보 문재인·박원순·안희정 3파전 양상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당내 대주자이자 친노·친문세력의 최강인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듯 했더니 어느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경선전에 뛰어들 준비를 갖추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또다른 잠룡으로 평가받는 정세균 의원과 김부겸 당선인이 대선 도전에는 잠시 주춤한 상태다. 정 의원은 국회의장 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김 당선인은 “당직이나 국회직 등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또다른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두관 당선인도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다.

여기에 순화규 전 더민주 고문은 ‘새판 짜기’를 언급하며 더민주 당내 경선보다는 당밖의 세력 규합에 신경을 쓰는 듯한 눈치다. 그러다보니 문 전 대표의 카운터파트너로 박 시장과 안 지사가 부상하며 3파전 양상으로 흐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먼저 박 시장은 5·18 추모식을 앞둔 지난 12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서울시장이 수도 서울을 비우고 지방인 광주에서 2박3일이나 일정을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광주의 민심 구애가

## 박원순, 광주서 출마 시사 발언 안희정, 차차기 위해서 나서야

절실했던 것이다. 박 시장은 이 기간 5·18 묘역 참배를 비롯해 더민주 당선자 워크숍에도 참석하는 등 더민주 당원으로서의 행보에 충실했다. 특히 박 시장은 전남대 강연에서 “뒤로 숨지 않겠다. 역사의 대열에 앞장서서 역사의 부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한 발언이다. 박 시장에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도 여간 빨라진 게 아니다. 18일 당일에 5·18 광주 추모식 행사에 다녀오더니 2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란히 섰다. 또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를 응원해야 할지 직접 숲을 때리기 위해 뛰어야 할지 정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불편 투수로 몸을 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내년 대선 출마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지

만 뒤안소로만 보면 문 전 대표와 더민주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와 같은 좋은 후배와 경쟁할 수 있으면 영광이다”라며 “그만큼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안 지사가 이처럼 대선을 향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좀 차이가 난다. 박 시장의 경우 이번 총선이 끝난 뒤 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이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로 고착화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한때 차기 지지를 1위에 올랐던 박 시장이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4~6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안 지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현재 51세 이기에 내년 대선은 오히려 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차라리 57세가 차차기, 또는 그 5년 뒤가 연령적으로는 더 자신스러울 수 있다. 다만 대선 경선에 나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차기 유력 주자로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게도 이번 경선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더민주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이 조기에 불붙으면서 문재인·박원순·안희정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성주 기자

# 박원순, ‘대동경제론’ 제시… 사실상의 대권 구상 해석

## 文 ‘더불어성장론’·安 ‘공정성장론’ 과 차별성 부각 의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성장과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대동경제(WE+economics)’를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를 늘리면 국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 시장의 ‘대동경제론’을 두고 사실상의 대권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더불어성장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초청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대동경제가 격차사회와 불평등사회를 해결하는 화두”라고 강

조했다. 박 시장은 “경제·일자리 정책의 속도와 방향, 비전, 방법 모든 게 과거로 되돌아간 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중앙집중적 성장과 고용 정책 때문”이라며 “획일적인 중앙집중형의 사고방식으로는 경제 돌파구가 생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형 창조경제’ 정책을 비롯해 서울시의 관광·MICE·IT·R&D 투자 등 주요 성과를 소개한 뒤 “지방정부에 관한 배분해, 맞춤형 혁신적 고용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경제도 하나의 일자리 보고”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란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를 육성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제가 취입한 이후 4년이 지난 뒤 5

### 국민의당 워크숍

#### 정부 노동개혁 찬성론 논길 안철수 ‘과견법 안된다 당론’

국민의당이 24일 개최한 워크숍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을 놓고 강연을 청취했다. 김준 국회의원보좌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발제에서 기업의 낙후성과 노조의 지대추구행위 모두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결과 부분별 고용 안정성에 현저한 격차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탈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전체적인 계산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며 “기간제법과 과견법은 남용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보정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대기업이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면 고용이 늘지만, 그 혜택이 사회적으로 나눠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익이 사회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숙련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이 평생 열심히 일한 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임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밖에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실요세율 인상 ▲두루누리사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와 관련,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회들은 이미 노동 4법 중 과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 법은 통과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